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3년 1월 3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3년 1월 5일 ~ 2013년 1월 18일

주요 키워드

1. 정부조직 개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15일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처로 이관한다고 밝혔음. '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처'로 바뀌게 되면 법률개정권 한을 갖게 되고, 예산과 조직이 확대됨. 한편 '식약처'로 식품분야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한편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를 나누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개편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복지부 개편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함.
2. 우리 제약산업의 새로운 도약 간담회 :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를 초청한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 예산 규모 등이 발표됨. 정부는 제약산업에 총 4,223억원을 투자해 지난해보다 54.7% 증가된 액수를 지원함.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R&D 비율 인증요건 강화방침, 각종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기도 함. 제약사들은 12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고, 리베이트 취소기준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3. 기타 : 총액예산제 도입 관련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 보건의료연구개발 연간 시행계획, 치과전문의를제 관련 논란, 천연물신약 무효화 쟁기대회, 미국 살인독감 확산 등.

1. 보건의료정책

○ 총액예산제 도입 관련 각종 의견 (1. 7)

총액예산제(Global budget)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단체와 총액으로 계약을 맺어, 계약액수 범위 내에서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사의 행위별 수가를 상대가치 점수로 환산해 지불하는 현재 지불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그리고 개별 의약품에 대해 가격과 사용량을 각각 관리하기 보다는, 개별의약품의 건강보험지출총액에 상한을 두고 관리하는 개념이다.

한국다국적의약품협회(KRPIA)는 최근 발간한 '2012년 제약산업 연간보고서'에서, 총급여비를 미리 결정하면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고가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없어지고, 의약품 공급자는 신제품 개발 투자를 하지 않아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핵심적으로 공급자의 경쟁력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으며, 예산분배와 관련하여 의료단체간·의료기관간·지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총액의 결정과정과 배분 주체, 계약당사자의 동등한 지위 보장, 배분의 주체 선정 등의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KRPIA의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약품비의 체계적 관리 로드맵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계와 연구기관 및 실무기관 근무자들은 3~5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의약품공급자와 제약사 관

계자들은 9~10년 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후자는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약공급자와 제약업계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제일 클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가 직접적인 약가 및 수량 통제를 포기해야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한 예측 결과는 약제비 통제, 의약품 부문에서 지출의 효율성, 의약품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 순으로 영향력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단일 정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될 경우 제약사들은 약가우대를 의료공급자들은 약제비 절감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 발표 (1. 7)

우선 12년 실시한 의약품 재분류에 따라 분류된 504개 의약품은 올해 3월부터 새로 정해진 분류대로 판매된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200개 품목, 반대로 분류된 262개 품목, 동시 분류된 42개 품목에 여기에 해당한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정책이 강화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를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카페인 음료는 1월부터 카페인 함량 표시와 주의 문구가 표시되고,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정책을 강화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소독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사용방법·사용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된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도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 권고 (1. 7)

권익위 이정보 위원장은 사회 취약 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국민연금 대상자 범위로 확대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하였다. 주요 사항은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10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자'로 범위 확대,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3년) 폐지, 이혼한 부부간 국민연금 분할 여부 및 비율 법원 판결 결정권한 개선, 이혼 시 공적연금 수령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분할 금지 등이다.

○ 보건복지부, 결핵관리종합계획안 마련 (1. 8)

정부는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여 결핵발생률을 2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인,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검진 체계를 개선하여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 체계를 도입하고, 결핵의심자 등에 대해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 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동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역별 호흡기센터에 호흡기 감염병 격리병상을 확충하고, 전염성·비순응성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김원중-박민수 파견 (1. 8)

인수위에는 부처별로 1~3명씩 50~60명 규모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복지부에서는 김원중 보건 의료정책관과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파견됐다. 이들은 보건 의료정책 전반과 건강보험정책 현안을 담당하며,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을 돕는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웠던 주요 보건 의료 분야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배치이다. 그런데 박민수 과장은 12년 포괄수가제 추진과 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대립을 세운 인물로, 의료계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의사 전문성이 확대된다는 기대가 허망해졌다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 한국-브라질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 서명식 개최 (1. 9)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은 12년 11월 양국이 서명했으며, 이번 서명식을 통해 협정이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 모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일정기간(최초 5년+3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파견근로자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브라질측에 제출하면 브라질에서의 연금 적용(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이 면제된다. 또한 해외 이주자가 한국과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한국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9억원으로 추정된다.

○ 보건복지부, 400개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예정 (1. 9)

복지부의 조사항목은 1/4분기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폐업 여부, 2/4분기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3/4분기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4/4분기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이다.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이다.

○ '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병의원 다수 적발 (1. 9)

식약청은 지난해 10~11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에 1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74개소 중 69개소에 대해서는 프로포폴 불법 사용 및 유통이 의심되어, 검찰청과 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 병의원은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불법 주사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일각에서는 연예인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식약청은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때까지 정말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3년도 의료관계정책 전망 발표 (1. 9)

이창준 보건 의료정책과장은 '병원 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위 사항을 발표하여, 차기 정부에서 5년 동안 제기될 보건의료 이슈들을 설명했다. 주요 이슈로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화, 궁정적 유인체계 강화, 공공의 새로운 역할, 본격적 고령화에 대비한 공급체계 정비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합리적인 보상체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며, 진찰료 문제와 토요일 수가 가산 등에 대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계와 정부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형성을 하고, 일부 의료인들의 일탈행동으로 생긴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411억원 투자 (1. 10)

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 1,411억원을 투자하여 24만명의 이용자를 지원하고, 2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3년에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지원서비스 등 143개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어 222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196억원을 투자하여 1만8,000명에게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을 지원하고, 121억원을 지원하여 1만3,000명의 노인에게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 가격 대비 10%까지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 서울시, 필수예방접종 무료화도 접종률 96.4% (1. 10)

서울시는 지난해 12세 이하 영유아 44만 명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화한 결과, 접종률이 96.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따라 10종 백신 11종 감염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1,504개 민간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한 결과이다. 이는 10년 접종률 79.9% 보다 16.5% 늘어난 것으로 감염병 퇴치수준인 95%를 초과했다. 서울시는 올해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약 55%로 늘려 영유아 뇌수막염 및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백신을 확대 지원한다.

○ 세계보건기구(WHO),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분야 협력센터 지정 (1. 12)

개발원은 보건의료분야 표준화(WHO-FIC) 협력센터로 지정되었다. WHO-FIC 협력센터란 국제질병분류(ICD), 국제의료행위분류(ICH),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준용어와 분류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이다. 표준화된 용어 및 분류체계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가 가능한 분석자료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근거중심의 정책개발·임상연구 활성화 등에도 활용된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1. 14)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목희·박인숙 의원과 공동으로 위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남의대의 부실운영으로 남광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취소된 가운데 부실의대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남의대 남광병원은 과거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병원 신입평가 전산 입력자료'의 퇴원환자 수 1만1,340명이 허위로 드러나고, 갖가지 기준이 수련병원에 미달하며 취소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의대와 협력병원간 별도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등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관동의대의 부속병원 부재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협력병원과 부속병원 교육 사이에 수준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교과부도 학교나 학과가 폐쇄될 때 학생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 부실교육에 대한 패널티로 이전한 학생들에 대해 추가 교육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문정림 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법안' 대표발의 (1. 14)

국시원은 24개 직종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관리·감독하는 곳으로, 법안 발의의 취지는 특수법인화를 통해 국시원의 미약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하여 국가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법안은 보건의료인 관련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국시원의 특수법인화가 이루어지면 국고 지원과 감독이 가능해지고,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또한 인하될 전망이다.

○ 신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5)

이는 장기·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 징수금과 체납처분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 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만3,904세대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탈세에 대한 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소득 축소탈루 혐의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도 발의했다. 탈세에 대한 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 (1. 1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조직을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며,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소속 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을 처로 이관했다고 설명했고, 이를 통해 '청'이 총리실 소속의 '처'로 바뀌어 법률개정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복수차관제 도입을 원했던 보건복지부는 개편에서 제외되었다. 식약청은 지난 98년 보건사회부 소속부서에서 외청으로 독립 신설된 후, 이번 개편으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한편 농림식품부도 농림축산부로 개편되어 식품분야가 식약처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보건산업에 대한 권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률개정권한을 갖게 되어 정책과 집행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으며,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도 증가하고,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의 승격도 가능하다.

○ 신의진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6)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신규설치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 모니터링, 마약류에 관한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신의진 의원은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1. 16)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부담능력에 기반한 합리적 목표 설정, 공정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우선순위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 체계적인 지출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제로 개편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기 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특정 질환을 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 등도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난색을 표하며, 사회보험 본연의 목표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운 심평원 소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관리 영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의학적 비급여의 허용조건으로 환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혼합진료금지, 건강보험에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개소 (1. 17)

이는 병원 간호사 인력을 늘려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입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무료 이용 제도이다. 서울의료원은 17일 90병상을 시작으로 총 623병상 중 180병상에서 환자안심병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이 결정되고, 이용일은 입원일로부터 15~22일까지 가능하다. 이용대상자는 모든 서울 시민이다. 환자안심병원은 '보호자없는 병원'과도 다른 개념으로,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여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 79명을 신규충원하여 간호사 한 명당 7명의 환자를 돌보게 했으며, 서울시는 이 사업에 3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환자안심병원 운영으로 모든 시민 이용가능, 간병비 부담 최소화, 일자리 창출, 병원직접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제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1. 17)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 보고서를 통해 현행 규정으로는 리베이트 적발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이 일정 기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차수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행 규정을 리베이트 수수액에 연동시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처간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제재조치가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료인이 시행 전보다 최대 100배나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전체 적발규모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 보건의료산업

○ 고 박주아 씨 유족, 검찰에 불기소처분 항고 (1. 7)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의료사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황당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족 측은 박주아 씨의 사망원인으로 로봇수술 적응증 여부, 수술 당시 천공 발생 여부, 수술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과실, 중환자실 인공호흡기가 빠진 후의 미흡한 대처 등을 제시했다. 특히 JCI 국제인증을 한국 최초로 받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중환자실에서 약 14% 정도가 인공호흡관이 빠진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울중앙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통해 명백한 의료사고 여부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 SK케미칼-국립암센터, '혈액지문 분석기법 이용 암 진단법' 사업화 협약 (1. 8)

위 진단법은 간편한 채혈만으로 방사능 노출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암센터와 SK케미칼은 '혈액지문 분석기법 이용 암 진단법'을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한 산연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용화 서비스는 올해 대장암 진단법을 시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SK케미칼은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와 안정적인 암 진단법 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발표 '의료기기 소비자 조사' 분석 (1. 8)

이번 조사는 일반 가구 1,00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의료기기 16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중 체온계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수는 585가구였으며, 콘택트렌즈(381), 부항기(286), 혈압계(272) 순으로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 비중이 높았다. 가정용 의료기기의 구입 및 대여 목적으로 11년 가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평균 34만원이었으며, 1회 구입 및 대여에 대한 지출 비용은 평균 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구입하는데 가장 비싼 품목은 100만원 정도가 드는 보청기였으며, 다음으로 의료용물질생성기, 의료용 스쿠터 순이었다. 연령과 소득이 높고, 자녀를 출가시킨 부부일수록 의료기기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 중 체온계·콘택트렌즈·개인용혈당기·혈압계 등은 30% 이상이 외국 제품이었는데, 이는 국산에 비해 1.5~1.9배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였으나, 만족도에선 국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계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1. 9)

이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시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조건들을 개선했다.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갑이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제품 취급금지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취급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내는 물론 계약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하고, 판매목표량 미달시 계약해지나 독점실시권한 박탈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거래계약시 을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적응증→적응증&약리성분)하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을 금지했다. 또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하는 즉시 계약해지를 금지했다. 또한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며, 자율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광고 RNL바이오 검찰 고발 (1. 9)

복지부는 RNL바이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험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소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에 대한 대국민 당부말씀'이라는 성명을 통해,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이나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 성명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투여를 위해서는 면밀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임상시험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만을 판매하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RNL바이오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고, 10일에는 홍콩에 동남아시아 난치병 환자 대상 자가 줄기세포 메디컬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허연계 지원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1. 9)

진흥원은 12년 8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특허연계 전략수립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위 보고회는 8~9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위 사업은 보건의료분야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전략 위주의 특허정보 분석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질적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있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산권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으로 실용화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지재권 확보 전략으로 특허무효전략·특허회피전략·비침해논리 개발·IP획득전략·R&D방향제시·라이센싱전략·에버그린 전략 등 과제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전략을 지원해 준다.

○ 전국대 연구팀, 인체 사멸세포 제거기작 첫 규명 (1. 14)

전국대 의생명과학과 강영선 교수팀은 몸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사멸 세포의 분업 및 협동적 제거 기작을 처음으로 밝혔다. 사람의 몸은 발육과 조직교체 과정에서 끊임없이 세포사멸이 일어나며 죽은 세포는 매우 효과적으로 생체 내에서 제거된다. 그런데 환경오염과 식생활 변화 등으로 사멸세포의 제거 기작이 교란되면 자가항체가 생성되고,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생긴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SLE), 자가면역성 림프 증식성 증후군(ALS), 중증 합병성 면역 결핍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생쥐 비장의 면역수용체인 SIGN-R1이 매우 적은 수의 사멸 세포를 빠르게 인식해 보체를 활성화시키고, 이 보체가 사멸세포에 고정됨으로써 혈액의 흐름을 따라 간으로 이동된 사멸세포가 간 탐식세포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 관련 성과 (1. 15)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실시한 위 사업으로,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대상 88개 품목 중 능소화(어혈제거 효능) 등 10개 품목의 유전자를 세계유전자은행(NCBI)에, 택란(강심이뇨 효능) 등 31개 품목의 유전자원을 국립생물자원관에 각각 등록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을 위한 사업의 결과이다. 12년에서 16년까지 총 8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지난 1년간 전남한방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토종한약재에 대한 유전자원 등록은 향후 나고야 의정서 발효시 우리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 연간 시행계획 마련 (1. 17)

복지부는 13년 R&D에 3,094억원을 투자하여, 전년 2,893억원 대비 6.9% 증가했다. 보건의료 R&D 절대 투자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국가전체 R&D 16조원 대비 6.8%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 중 2,541억원은 주요 질환 임상연구, 첨단의료 및 신산업창출, 감염병 등 공공보건연구, 전문인력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의 4대 분야에 계속과제로 지원된다. 나머지 553억원은 신규과제로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창의적·문

제해결형 중개연구(115억원), 신약 개발(110억원), 융복합 보건의료기술(65억원),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52억원) 등이 포함된다. 13년에는 다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콘소시엄을 구성해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보건의료 R&D 중장기 5개년 추진계획 시행원년으로, 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창출을 목표로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분야를 수립해 R&D 예산확보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3. 제약산업

○ 2011년 세계 제약시장 성장률 (1. 5)

IMS 헬스데이터에 따르면 11년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9,555억달러로 전년 대비 5.1% 성장하였다. 북미 지역 제약시장 규모(3,471억 달러)는 전년 대비 3.0%, 유럽 제약시장 규모(2,654억 달러)는 전년 대비 2.4% 성장으로 전체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아시아·아프리카·호주 시장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652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고, 일본의 제약시장규모(1,112억 달러)는 5.6%, 라틴아메리카(667억 달러)는 8.9% 성장하였다. 현재 신흥 제약시장의 성장률이 성장하고 있는데, 09년 신흥제약시장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터키, 한국 등 7개 국가가 포함된다.

○ 자체개발 의약품 수출 현황 (1. 5)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최근 한국제약산업 연구개발백서를 발간했다. 내용을 보면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 17곳은 현재 34개국에 자체 개발 주요제품을 수출하고 있었고, 주요 수출국은 일본·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외의 지역에도 수출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베트남이 329개 품목으로 최다 품목 진출국이었고, 이어 필리핀 198개 품목, 파키스탄 52개 품목 등이 진출했다. 11년도 주요제품의 수출액은 17억8,637만 달러를 기록했다. 종근당 계열인 경보제약이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수출액(5,477만 달러)을 달성했고, 이어 대응제약(2,605만 달러), 동아제약(1,849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생산실적표' 발표 (1. 9)

최근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 267개 제약사의 완제의약품 생산액은 13조8,808억원으로 전년(14조2,347억원) 대비 2.5% 감소했다. 이중 생산금액 상위 20위 업체의 실적은 7조1,023억원으로 전년(7조5,658억원) 대비 6.1% 감소했지만, 전체 생산액의 51.2%를 차지했다. 생산실적이 가장 높은 제약사는 동아제약으로, 생산금액은 7,698억원으로 전체 제약사 생산실적 대비 점유율은 5.7%다. 대응제약은 6,413억원으로 2위, 한미약품은 5,289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 대응제약, 백혈병치료제 신약 '슈펙트' 발매 기념 심포지엄 (1. 11)

슈펙트는 일양약품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아시아 최초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대응제약에서 판매를 맡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 카를로 교수가 '글리벡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2세대 TKI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혈액종양내과 김성현 교수가 슈펙트 2상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슈펙트는 주요 세포유전학적 반응률과 안전성에서 우수성을 보였고, 초기 반응률 및 약효 우수성도 뛰어나다고 밝혔다. 그리고 슈펙트는 약효가 지속되면서 이상반응 조절이 잘 되었고, 현재 처방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중 가장 저렴해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슈펙트는 현재 2상 임상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권 20개 대형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초기환자를 대상으로 다국가 임상 3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 2012년 약가인하 영향 분석 (1. 12)

12년도 전체 원외처방액은 10.8% 정도 감소하였다. 상위 5개사 중 동아제약은 3,39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여 11년 4,189억원 대비 19.1% 줄었고, 유한양행은 1,934억원으로 11년 2,257억원 대비 14.3%가 감소했다. 대웅제약은 6.7% 감소, 종근당은 2.2% 감소, 한미약품은 0.1% 감소하여 상위 5개 제약사 모두 원외처방액이 감소하였다. 이는 다국적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상위 9곳의 다국적제약사 원외처방액은 1조6,730억원으로, 11년 1조7,077억원 대비 2% 감소하였다. 한국화이자사는 3,279억원으로 11년 3,570억원 대비 8.2% 감소하였고, 한국 GSK·한국얀센·바이엘코리아 등도 두자리수 이상 감소하였다.

○ 일본, '글루타민산(glutamic acid)'으로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합성 성공 (1. 13)

일본 미생물화학연구소와 제약사 메이지세이카파마는 글루타민산으로 위와 같은 성과를 올렸다. 글루타민산은 신경전달에 관여하고 있으며 뇌에 많이 분포한다. 글루타민산 유래로 타미플루를 제조하면,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합성물질의 구조를 개선하기 쉽고,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응하기 쉽다고 밝혔다. 로슈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타미플루는 '팔각(Star anise)'을 원료로 하여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 연구진은 이번 성과로 저렴한 원료를 사용해 타미플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졸피뎀' 함유 제제 주의 당부 (1. 14)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졸피뎀 관련 임상연구 결과, 복용한 일부 환자의 혈중 약물농도가 다음 날 운전 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게 나타나, 복용 주의 권고를 내린바 있다. 이에 식약청도 불면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 함유 제제에 대해, 복용 다음날 활동지장 위험 초래를 이유로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에 수면운전 등 주의집중장애 관련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며,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전성서한에 포함되는 제품은 15개 제약사 17개 품목이다.

○ 녹내장치료제 '타플로탄점안액', 사용량 급증 약가인하 (1. 15)

타플로탄점안액은 일본계 제약사인 한국산텐의 품목으로, 건보공단은 지난 10월부터 약가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최근 타결지었다. 이는 시민단체가 약가 인하를 요구한 품목으로, 최근 약가가 급격히 증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 올라 약가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위 제품은 급여 등재 당시 보험약가가 ml당 8,100원이었는데, 급여 등재 후 3년제인 12년 예상사용액의 30%를 초과해 사용량 약가연동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제품은 3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우리 제약산업의 새로운 도약' 간담회 (1. 17)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를 초청하여, 올해 제약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손건의 복지부 차관은 혁신형 제약사를 정책파트너라고 칭하며,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R&D에 대한 노력도 지금보다 배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기등재목록정비·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를 표하며, 이러한 영향이 향후 2~3년 정도는 더욱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체계적인 정책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제약사들이 그 동안의 리베이트 관행을 타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을 연구개발(R&D)쪽에 좀 더 무게를 두어, 인증요건을 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율 15년 10~12%, 2018년 15~17%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요건은 5~7% 이고, 이를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제약사들은 12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리베이트 취소기준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날 지원규모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정부는 제약산업에 4,22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지난해(2,729억원) 보다 54.7% 증가한 액수를 지원한다. 이 중 신약 개발 R&D에 2,493억원(복지부 1,318억원, 지경부 543억원, 과기부 632억원)을 지원하고, 여기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 공동R&D 지원 60억원 등 신규

내용도 있다. 그리고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360억원, 항암신약개발사업 110억원, 줄기세포 연구 958억원 등이 지원된다. 제도적으로 신약의 보험약가 등재절차도 간소화되어 1월부터 보험급여기준 고시기간이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하반기에는 신약가격 평가기간이 30일 단축(275일 소요)된다. 또한 하반기부터 위험분담제도를 시행하여, 희귀 의약품·항암제·국내개발신약 등의 건강보험 도입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제약사와 분담한다.

○ 한미약품,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승소 (1. 18)

서울고등법원은 한미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동아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에 이은 다섯 번째 승소이며, 남은 사건은 한국휴텍스제약의 리베이트 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09년 철원지역 보건소의 리베이트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7개 제약사가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철원지역 보건소 리베이트라는 일부 사안을 전체로 확대·해석해 약가인하율을 적용한 복지부의 처사가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제약사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는데, 이는 검찰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른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1. 18)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단과 제약사 양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별도 위원회 설치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외국 약가결정제도 중 협상방식을 운영하는 사례 고찰 등을 통해, 현재 공단의 약가협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적용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은 주요국의 선행사례 및 주요 동향 고찰, 그간 공단의 약가협상 운영방식의 성찰과 성과 분석, 국내 적용 가능한 투명성 강화 제도 및 세부실행 방안 제시 등이다.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4. 의업단체

○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단, 정치세력화 필요 주장 (1. 6)

의협이 최근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의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4%가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세력화의 기대효과로는 81.5%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반영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의료인 권익신장과 대국민 신뢰회복 등이 있었다. 한편 정치세력화를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73.8%가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의료수가 조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후원회 참여와 보건의료 정책제안 제시 등이 제기되었다. 의협은 향후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병원협회,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 관련 설명회 시작 (1. 7)

병협은 7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병원계 현안 설명회를 가졌으며, 각 지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 참여한 병원들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을 근거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병협측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들이 동시에 같은 수수료율로 인상통보를 한 것은 고발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과 카드회사의 가맹계약 해지로, 특정 회사의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병협 차원에서 단체로 카드사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차기 정부와 병원 등 공공성 기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 승인 (1. 8)

한의협은 회장 선거제를 현행 대의원 투표제(간선제)에서, 회원 직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정관변경에 대한 사항을 승인받았고, 오는 3월 시행되는 41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부터 적용된다. 한의협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을 의결하였다. 특히 시도지부장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담화문 등을 통해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왔다.

○ 대한의사협회,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반대 (1. 8)

지난 12월 26일 남윤인순 의원은 처방전 2매 발행 강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약사에게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했다. 8일 의협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반대의견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고 환자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에서 진정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 검토 (1. 9)

의협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의료계 신년교례회에서 임채민 장관을 만나고, 수차례 의정협의회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며, 12년 5월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며 건정심을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건정심 복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토요일무수가산제 실시예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건정심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고서는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박인숙 의원이 건정심 구조개선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건정심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 문진약국 가루약 거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 대응 (1. 9)

환연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병원 앞 가루약 조제거부약국의 행태를 문제삼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앞 약국들이, 약이 없거나 기계가 고장났다는 이유를 들며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가루약 조제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들이 다른 약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환연은 가루약조제거부약국 신고콜센터를 임시로 설치하여 환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지역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적극적인 진상조사 및 현 행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수가구조 때문이라며, 수가구조 개선으로 양질의 조제투약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유감 표명 (1. 9)

심평원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공개했다. 이에 병협은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병협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이 지가 차이·병실규모·시설·구비비품·시공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병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 대한치과개원의협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문의제 졸속결정 유보 결의대회 (1. 10)

치협 회관에서는 위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6일 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전문의제 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200여명의 치과개원의가 참여했고, 고승석 건치 공동대표가 이에 대해 연대투쟁을 공식제약한다고 밝혔다. 치개협은 치협과 대의원들에게 소수정예 전문의 대전제 유지, 전문의제 취지 망각한 복지부 안 반대, 전공의 수 축소, 치과통합임상통합전문의 안 철회, 임시총회에서 전면개방 유보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의제 시행 이전 비수련자에 대해 가칭 '치

과통합임상전문의'라는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일정 교육 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치개협은 개원의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30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받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학생들과 개원의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치과는 1차 의료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모든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소수 전문의에게 진료만도록 하는 의료전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문의제의 취지라는 것이다. 건치 역시 01년 치과계가 8%의 소수정예 원칙을 합의했으며, 소수전문의제를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단체는 치협이 소통을 거부하며 줄속추진을 해왔으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무기한 연기와 전문의제 특별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그리고 14일부터는 '치과전문의제 전면개방안'을 철회하라며,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추진의 건' 관련 대한치과협회 입장 (1. 16)

치협은 현행대로라면 14년 이후 극심한 갈등 표출이 예상되며, 협회의 안은 복지부가 각 단체와 충분한 협의 끝에 내놓은 안이라고 밝혔다. 임시총회를 서두르는 이유는 우선 전속지도전문의제가 올해까지 끝나 더 이상 전문의제 유예가 어렵고, 정부가 교체되며 복지부의 인사도 교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는 20년이면 전문의가 3,400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는데, 지금 임의수련자 7,000여명에 전속의 600여 명이 법적투쟁을 준비하여, 전문의와 비전문의 간의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6일 예정된 임시총회 안건에는 인턴제 폐지, 11번째 전공과목 신설, 미수련자에 응시기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치협의 김세영 회장도 신년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소수정예라는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년간 시행해온 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전면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치개협 등이 요구하는 특별기구 설치나 임시총회 유보 요구는 현 체제인 대의기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한국제약협회,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도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1. 14)

제약협회는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약은 사용량 약가인하를 해야 할 명분이 있지만,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된 약제는 추가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대형품목에 대해 조금만 처방액이 늘어나도 약가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이는 제약사가 경쟁우위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추산에 따르면 252개 품목을 기준으로 사용량 약가인하액은 580억원 수준으로, 신규 신약에 국한하여 사용량-약가인하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는 최초 1년의 판매 계획에 나타난 예상사용량을 기준으로 실제 30%를 초과하면 약가를 인하하는데, 신약 발매 후 최소 3~5년 경과 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연간 청구액 100억원 미만인 약제는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제안과, 협상시 일정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협상을 거치지 않은 약제(유형4)의 협상대상 선정시 현행 '등재 후 4년'을 '발매(청구)된 지 4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약가인하'와 'payback(예상사용량 초과분 반납)' 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시민단체, 주요 제약사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소송 제기 (1. 15)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28일 대응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과 한국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등 2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환수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고혈압·고지혈증·당뇨약 중 1개 품목을 선정해 차기 소송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 등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로 약값에 상승하여 환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판단 때문은, 역지불합의로 문제가 되었던 조프란은 약가에 리베이트가 13.5%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대학교 병원 앞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환수소송을 제기할 소송단 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리플릿을 배포했다. 리플릿에는 제약사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규모, 리베이트 유형, 리베이트 현황 등이 담겨있다. 이들은 리베이트 환수소송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며 처방이 많은 약을 기준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가 밝혔다.. 그리고 리베이트 행위가 세 번 적발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현재 민사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리플릿 3만장을 전국 상급종합병원 앞에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송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환자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물에도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노조 출범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간담회 (1. 15)

대전협은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노조 발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노조는 성장배경과 다양한 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경문배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노조가 안정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때까지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회 전공의 노조총회 및 노조문화제는 오는 26일 오후 개최된다.

○ 대한의사협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건의 (1. 16)

의협은 최근 병협·약사회·치협·한의협·간협 등 보건의약단체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인수위에 보건과 복지를 나누어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분야가 복지분야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단일조직으로 편성되어 보건의료가 복지와 혼재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정책이 복지정책에 밀려 뒷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천연물신약 무효화 쟁기대회 개최 (1. 17)

비대위는 1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총 쟁기대회’를 개최했다. 쟁기대회에는 휴진을 하고 참가한 한의사들과 12개 한의과대학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천연물신약 정책과 의사의 IMS 사용 등에 대해서 규탄하며, 반한의계 정서로 흐르고 있는 정부정책들에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의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은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이익추구만을 위한 결과라고 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해지고 1조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 제정과 이를 집행할 ‘한의약청’의 즉각 신설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에 한약제제 한방의료보험 확대와 현대의료기기 관련 정책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쟁기대회를 개최하기 전 제약협회는 16일 발표를 통해, 레일라정 등 7개 천연물신약은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시험을 거쳐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 및 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과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천연물신약이 안전성 및 약효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 전국의사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건강증진협력약국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1. 17)

‘서울시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실시되며, 서울시 2~4개 구에서 40개 약국을 건강증진 협력약국으로 선정해, 협력약국의 약사가 금연상담을 할 때 상담료 15,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해당사업이 의료법 및 약사법에 완전히 위배되고,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을 뿐인데, 의학적으로 중독성 질환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된 흡연에 대해 약사에게 문진을 허용하고 상담료를 주는 것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5. 기타

○ 미국, 백일해 환자 증가에 재유행 우려 (1. 7)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2년 미국에서는 약 42,000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하여, 1955년 이후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CDC는 최종적으로 집계되면 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백일해 환자가 증가한 것은 현재 사용되는 백일해 백신이 이전 버전보다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뉴스위크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일해의 75%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났다. 이는 백일해 면역력은 마지막 접종 후 2~3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현재 백일해 백신은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대신 면역력이 약화되고 있다.

○ 저임금 젊은 여성, 고혈압 위험도 증가 우려 연구결과 (1. 10)

미국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터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 연구팀이 '유럽 공공 건강저널'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위와 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낮은 시급을 적용받는 25~44세 여성 직장인들에서 고혈압 위험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젊은 여성들은 통상적으로 고혈압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만큼 충격이 되고 있으며, 시급이 2배로 상승하면 고혈압 위험도는 평균 16% 줄어든다고 밝혔다.

○ 일본 대법원, 일반약 인터넷 판매 합법 판결 (1. 11)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켄코닷컴과 웰넷은 지난 10년 후생노동성을 상대로, 위장약·감기약·발모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냈다. 일본에서는 지난 10년 도쿄지방법원이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불법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고등법원은 합법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손을 들어주며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일반의약품의 통신 판매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정한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후생성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전면 해금을 요구해온 인터넷 관련 업계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약물사고 피해자 단체 등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 미국 전역 독감 비상 (1. 14)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월 2주차 미국 122개 도시의 사망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전체 사망자 중 7.3%가 감기나 폐렴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독감이 유행단계에 돌입하고 보스턴에 이어 뉴욕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번 독감으로 현재까지 전체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기고, 18세 미만 미성년자 20명이 사망하였다. CDC에 의하면 뉴욕시를 포함한 47개주에서 독감이 위험한 수준이며, 뉴욕시는 현재 2만 여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발생하였다. 보스턴은 독감 환자가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난 700여명에 이르고, 4명이 사망하였다. 이번 독감은 H3N2 바이러스로 다른 독감보다 심한 고열과 몸살을 동반한다.

○ 미국 뉴욕 소재 검시관실, DNA 검사 실수 발생 (1. 14)

미국 주요 언론들은 뉴욕에 소재한 검시관실에서, 이전에 다루어졌던 성폭행 사건 800건 이상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모직원이 실책을 범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는 2년간 자신이 다룬 412건 중 생물학적 증거가 분명한 DNA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사건이 현재까지 26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남아있는 431건을 더 조사하면 더욱 많은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성폭행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폭행범의 정액·침·혈액 등을 검시관실로 보내는데, 상기 직원이 흔적을 못 보거나 검사에 실패하면 미검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뉴욕시 의회는 오는 22일 긴급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검시관실은 직원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고용량 비타민 요법, 질병 치료 방해 가능성 제기 (1. 13)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최근호에 발표되었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

했다. 지난 수십년간 학계에서는 고용량 비타민제에 포함된 항산화물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제로는 병의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량의 항산화물을 포함한 고용량 비타민제는 유해산소를 몸에서 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팀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유해산소가 인체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유해산소가 충분히 존재하면 동물들의 꼬리를 다시 자라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등, 유해산소가 조직의 재생과 직접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블루베리 등에 들어 있는 항산화물이 말기 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제임스 왓슨 박사의 주장 직후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 2012년 노로바이러스 88.5% 급증 (1. 16)

질병관리본부는 12년 한국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가 49건으로, 11년 26건 대비 88.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별 발생율을 보면 2월 52.2%, 3월 45.5%, 11월 4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변종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분석을 위해 13년부터 노로바이러스 백신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영국·프랑스·뉴질랜드 등 전 세계적으로도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지금까지 약 12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산하였고, 일본에서는 지난 8일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된 도시락을 먹고 2,000명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사태가 있었다.

○ 질병관리본부,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1. 17)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환자분율이 13년 제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4.8명으로 유행기준인 4.0명을 초과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12년 제51주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의 발생 경향을 볼 때 유행기간이 6~8주 지속되며, 유행정점에서는 유행기준의 약 5배까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